

일자리 창출과 지방재정의 운용

강 인 재
전 북 대 교 수

I. 서 론

경제침체 속에서 상당수 젊은 세대는 희망이 없다고 비탄하고 있는데 이는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취업이 어려운 세태를 반영하는 말이다. 고용문제가 현경제위기 하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슈의 하나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인데, 다행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중앙정부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문제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했으나 아직도 IMF하에서 시행했던 공공근로사업 위주의 고용정책이 유지되고 있으며, 많은 자치단체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턴 채용 사업을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일자리 창출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업무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의 경제·사회적 특성에 부합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책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결정과 관련된 주된 의사결정자는 주민·관료·정치인, 그리고 중앙정부이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치단체장과 행정 공무원들이 주도하고 있어 주민과 지방의회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적는데, 지방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즉 책임성과 효율성을 견지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지방재정의 특징인 자율성과 다양성을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기존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들을 검토한 후 앞으로의 과제를 재원조달과 지출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사업의 평가

1. 기존 일자리 창출 사업

1)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존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를 위한 각종 세제 및 자금지원도 넓은 의미의 지역내 고용창출과 관련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조직운영,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기술·정보지원, 수출지원 등 각종 사업을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첫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자치단체 내 중소기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및 기술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창구 역할 및 신기술 지도 등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으로 운전자금(경영안정자금), 시설투자자금, 신기술사업화자금, 벤처창업자금, 여성창업자금, 중소기업통구조시설개선사업, 소상공인 육성자금, 구조조정(기업회생)자금, 대·중소기업 협력사업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그 지원 금액이 상이하다.

셋째, 기술·정보지원으로 자치단체가 제공하고 있는 기술·정보 지원은 ‘지역협력연구센터운영,’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지원,’ ‘지역기술혁신센터,’ ‘신산업(BT, IT) 집적지화촉진 지원사업,’ ‘이업종교류 지원사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중소기업정보 지원사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생산현장 애로기술지도,’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지원사업’ 등이 있다. 기술·정보 지원사업 또한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지원금액 또한 각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타난다.

넷째 수출지원서비스로 자치단체의 수출지원서비스 사업은 ‘해외판로개척지원,’ ‘수출경쟁력 확보지원,’ ‘전자무역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간 민선 자치단체장들은 투자유치를 자치단체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장들의 노력으로 기업유치에 있어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적극적인 창업과 투자유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함으로써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다변화를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노력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과의 차별성(예 중소기업

업청의 각종 사업)이 크지 않으며, 관련조직의 확대와 백화점식의 사업추진으로 사업의 효과가 미미한 경우도 적지 않다. 자치단체의 기업지원사업은 자원의 투입(input)과 사업만을 강조하여, 투입된 자원의 효과, 즉 고용창출에 대한 평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2) 사회복지분야의 일자리 창출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전이라는 복지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자활능력 배양, 기능 습득 및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격은 자활지침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한정되어 있다. 2000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자활사업비로 국비 및 도비가 지원되고 있다. 조건부 생계급여제도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 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하고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사업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영농사업단, 톱밥사업단, 빨래방 사업단, 로컬푸드사업단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지역혁신서비스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를 발굴·선택하고 중앙정부가 선정·지원하는 지역사회 주도의 수요자 중심 사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은 표준형과 자체개발형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독서인지능력 향상과 아동비만관리 등 중앙에서 지정한 사업이며, 후자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노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사업들을 발굴·시행하는 것으로 일반기업들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어 기존의 비영리복지기관 중심의 전달 방식과는 다른 시장지향형으로 정책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다. 전북 완주군을 예로 들면 저소득층 아동 5,000여명(저소득 장애아동 150명)을 대상으로 1대1독서지도(8세미만)인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장애아동특수교육치료서비스, 문화체험서비스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운 사회서비스를 일 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노인일자리사업은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 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공공분야(공익, 복지, 교육형) 및 민간분야(인력파견형, 시장형)로 구분되는데 공공분야는 시·군, 읍·면 등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분야(인력파견형, 시장형) 전체와 공공분야(복지형, 교육형) 중 일부는 민간수행기관(노인복지센터, 시니어클럽)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날로 증가하는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방지하고자 말벗이 되어 외로움과 고독감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생활관리사를 채용하는 것이다.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 중에 정착지원사업은 취업반을 운영하여 고학력이주여성의 사회진출 도모와 가계의 경제안정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자국에서 이미용자격으로 일했던 여성을 모집하고 취업을 알선한다든지, 영어가능자를 영어보조교사로 활용하는 사업이 있다.
- 보육사업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저소득층 아동의 가구에 대한 소득, 재산을 파악하여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육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등의 운영비 및 기타 경비를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현재 민간경상 보조금 지원방식에서 2009년도에는 학부모대상 전자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실시 예정이므로 학부모의 보육시설 선택의 폭과 합리적 선택의 기회부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맞벌이 부부의 사회적 참여기회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 여성능력개발사업은 여성들의 단순인력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하는 것이다.
-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은 근로가능한 중증장애인에게 근로기회 제공과 경제적 자활, 자립도모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농산물 관련 및 청소용역 등 지역연계 가능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육성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신규영농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립영농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유지를 위한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잡 셰어링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2월 20일 현재 전국 79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서 잡 셰어링을 실시하여 약 3만 4천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참여사례는 직원의 임금반납형, 성과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반납형, 예산절감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청년실업 및 실직가장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임금 삭감 등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자발적인 ‘잡 셰어링(Job Sharing)’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하남시는 새로운 방식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경비를 절약해 100억원을 만든 후 공공부문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청소·홀몸노인 도우미 등 20여종의 일자리를 만들고 하루 3만 2,000원의 일당을 지급하여 하루 평균 460명의 일자리를 공급하는데, 이는 직장이 없는 만 18-65세의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소상공점 일자리는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식당·카페·세차장·옷가게 등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 1인당 급여의 50%를 보조한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선불카드를 지급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조선일보, 2009. 2. 27일자).

청년 인턴 사업은 인천시에서 이미 2007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인천시는 올해는 93억원의 예산으로 시에서 인턴을 고용한 후 시와 기업체에서 10개월 동안 일하게 하고 월 100만-110만원의 월급을 줄 예정이다.

3.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창출사업의 평가

기업지원서비스에 소요된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에 기여한 성과평가와 함께 기업 등 서비스 수혜자의 만족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주민의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등 기업유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소프트적인 측면을 제고하는 자치단체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간 상당수 기업유치사업은 실질적인 지원에 치중하기 보다는 지원 사업 개수를 확대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소기업청의 기업지원 서비스나 모범사례로 부각된 타자치단체의 사업을 모방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략적 사업에 자치단체의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에서 투자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 소속의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자치단체간의 경쟁을 통한 효율성 확보가 가능한 분야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그간의 복지차원의 일자리 창출사업은 투입예산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평가하

기 보다는 특정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의의를 둔 경우가 많았으며, 몇몇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기보다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의 잡 세어령사업은 소비진작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청년이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공공근로사업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가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Ⅲ. 효과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언

1. 인력동결과 신규일자리 창출의 조화

현정부는 그간 실용성을 기치로 비효율적인 정부조직을 줄이고, 공무원의 인력을 동결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실제적인 성과 여부를 떠나 구조조정, 공무원 인력동결이라는 이미지가 각인 되어있다. 비효율적인 조직과 과다 인력을 감축하고, 정부의 각종 규제를 철폐해 시장의 활력을 높이자는 정책에 반대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나 전세계적인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10개월 동안만 일하게 하는 청년인턴으로 해결할 수 없다.

최소한의 기간제로 근무한 후 성과가 좋으면 정식으로 채용하는 절차를 택하거나, 정부가 그 간에 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인력동결은 그간 과도하게 많은 인력을 보유한 일반 행정업무에 국한되거나 조직이 중복된 경우로 그간 정부가 하지 못했던 많은 사업들을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시켜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는 사업을 획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몇 가지 사업을 예를 들어보자.

① 지역통계기반의 확충

그간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자수, 취업률 및 세부분류, 소비지출액(유형별총지출, 가구별총지출, 의복, 기부, 교육, 오락, 식음료, 의료, 주택, 교통 등), 지역내 소득자료가 미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이 지역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기가 어려웠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결정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득, 고용, 소비 등 자료를 산출하여 자치단체들이 재정계획 수립과 지역발전 계획, 중앙정부의 보조금 결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통계관련 인력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②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새울, 인사, 재정, 건축, 지방세 등 5개 업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각실과에서 고유한

정보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나 정작 자치단체의 모든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정책결정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은 부재한 실정이다. 현재의 사업관리는 단편적인 집계에 그치고 있어 집행의 모니터링, 성과평가 등 총체적인 사업관리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IT분야는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연결관계로 고용효과가 큰데 통합시스템구축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꾀함과 동시에 단순 코딩에 불과한 IT산업 수준을 시스템분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③ 복지·농업분야 보조금의 투명성 제고

그간 직불금 등 농업분야의 보조금과 각종 사회복지지원금의 전달과정에서 일부 수급자와 관련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누수되어온 정부예산이 상당수인데 보조금 전달체계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④ 각종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그간 소홀히 다루어진 소방, 공공시설 및 대규모 민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추진하여 사전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보완에 힘써야 할 것이다. 과거 졸속 성장시대에 야기된 안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부실공사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원조달

그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은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사업과 최근 잡 세어링을 위한 예산절감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급여, 성과상여금, 복지후생금, 연가보상금 등 자발적으로 공무원이 고통을 분담하는 형태나 업무추진비, 사무용품비, 예비비, 행사성경비, 해외여행경비, 산업시찰비 등을 절감하는 방식을 택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수혜를 받는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사업의 원가를 낮게 인식하여 주민에게 불요불급한 사업을 시행하는 우를 범하기 쉽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사한 사업에 대한 중복 투자, 명확한 목표와 성과지표의 부재, 성과지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업효과에 대한 고려가 적으며, 절차만 중시하는 계약과정을 통해 재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진정한 사업원가(cost)에 대한 인식과 원가심사를 통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예산절약은 불필요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다.

3. 일자리 창출의 기본원칙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은 투자 대비 고용비용이 높은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산업별 고용증대효과는 제조업보다 사회서비스산업, IT, 건설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 미래 성장 및 국가발전의 기반으로 작용하거나 서비스전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청년 인턴, 공공근로사업 등은 주로 한계소비성향이 큰 계층의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의도로 추진되고 있으나 고용 대상자들이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자신의 경력이나 장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인턴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 시각은 채용된 청년인턴이 각자의 전공과 희망사항에 따라 적소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청년인턴이 종료된 후에 구직 활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인턴의 경우에는 예산이 더 소요된다 하더라도 참여자 자신의 능력 함양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1-2년 정도 늘리고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4. 효율적 재정운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은 단순한 경상적 경비의 절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복사업의 통합이나 원가심사를 통한 사업비 절감, 국고보조사업의 통합을 절감한 재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 기회에 중앙정부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포괄 보조금화하는 과감한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웃 자치단체와 연계 발전을 모색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웃 자치단체와 협조가 아닌 경쟁관계를 유지하여 칸막이식 예산운용을 하는 자치단체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하겠다. 새 정부 들어서 행정구역 개편과 광역경제권 문제가 이슈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발전 과제 발굴, 공공시설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데 정부는 초광역권과 기초자치단체간 공동발전 과제 개발을 할 경우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상수도, 쓰레기 등의 과감한 아웃소싱으로 자치단체 조직의 몸집을 최소화시키거나 민간의 발전된 기술을 도입하여 상하수도 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경제발전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 지역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경제 통계의 작성 등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나 예산의 제약 혹은 정책결정자의 인식 부족으로 하지 못했던 일을 새롭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학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를 통해 에너지절약형(태양열 등), 안전성을 지닌 시설물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건설경기의 활성화와 다양한 에너지절약형의 자재 구입을 통한 경기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정부부문의 구조조정과 함께 그간 정부가 담당하지 않았던 분야의 과감한 신규인력채용으로 실질적인 고용 창출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일반직 공무원 채용은 소수에 그치고 전문분야의 공무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정부회계의 복식부기·발생주의 전환에 따른 공인회계사,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률전문가, 감사·평가·기획·조정·분야의 전문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 고령화와 여성 사회활동 참여 증가로 인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양적 증가가 예상되며, 소득 증가로 인해 사회서비스 수요의 다양성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도시와 농촌의 차별적 적용 등 지역의 특성에 부합한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예를 든 하남시와 같은 도시지역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고용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제공기관의 사업비용을 절감시켜주고,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농촌지역은 민간기업이 참여할 유인이 적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거나 민간과 합동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가 2002년 말 노숙인 가운데 자립의지가 있는 이들을 모아 ‘자활 영림단’을 꾸렸는데 이들은 경북 봉화, 강원 영월, 인제 등 국유림에서 나무를 심고, 키우고, 베고, 해충방제까지 하는 숲의 모든 것을 관리하며 자립의 의지를 키우고 있는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농촌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공공사업에 지역내 주민을 고용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주택 보수를 통한 주거의 질을 높이거나, 노인 및 부녀세대로 구성되어 자구능력이 부족하여 재난에 대해 취약한 계층의 생활안전시설개선사업, 폐가가 되어 방치되는 빈집정비사업, 농촌가로등유지관리, 승강장유지관리 등 공공시설물 관리업무를 예로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분야는 수요 변화에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 인력공급체계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는데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사회서비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관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전문성이 높지 않아, 향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제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보증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만이 유일하게 서비스업 관련 기업의 신용보증(소상공인 신용보증)을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신용보증재단도 기본적으로 제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관련 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조세지원도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같이 제조업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서비스의 산업화를 위한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1996년 이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2007년 현재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2.3조원 보증공급규모를 운용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자금, 세제상의 지원과 함께 자치단체가 직접 제공기관을 일정기간 관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전상경(2007). 현대지방재정론. 서울 : 박영사.

손희준외(2008). 지방재정론. 서울 : 대영문화사.

이재원(2008).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

조현승(2009). 해외 주요국 사회서비스의 산업화 추이 및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산업화 현황. (재)사회서비스관리센터 제1차 바우처 연구포럼 발제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